화순군수 후보 전화여론조사 선출

1차 컷오프 후 2차 당원+유권자 50대 50으로

민주 최고위 확정 … 도의원 보선 추가 판 커져

민주당이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나설 후보를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 나설 후보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으며, 홍이식 전남도의원이 군수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남도의원(화순 2) 보궐선거가 추가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 경선방법 확정**=민주당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전남도당이 1·2차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한 화순군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의결했다. 1차 경선은 지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전화면접 여론조사로 이뤄지며, 1차 경선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이어 전 당원 전화면접 여론조사 50%와 비당원 유권자 전화면접 여론조사 50%의 2차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초순께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선 후보자는 애초 ▲구동기 호남대 겸임교수 ▲김이남 국제 신학대 초빙교수 ▲김재택 무진의료재단 이사장 ▲김형래 동복조합장▲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임근기 화순부군수 ▲홍이식 전남도의원 등 7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임근기 화순부군수가 경선방식을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6명의 후보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임 부군수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만 유리해 결국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1차 컷오프를 통해 경선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은 당헌·당규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며 "임 부군수의 경선 불참은 민주당 경선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직원을 냈더라도 퇴직처리가 안되면 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위배됨에 따라 사실상 경선 참여자격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출마선언 줄이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김형래 전 화순 동복농협 조합장과 홍이식 전남도의원은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4·27 화순군수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화순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로 얼룩진 화순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세력을 뽑아야 한다"며 "지난 20년 동안 동복농협을 이끌면서 검증된 실무행정 경험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순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화순군은 세 번째 군수직 중도하차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며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자치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감으로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공명선거 합시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7 화순군수 재선거를 한 달 앞둔 28일 오전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孫-柳 '김해 충돌' 벼랑끝 승부

보선 단일화 협상 막판 진통 거듭

野 후보 단일화땐 與 김태호 이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영남 교두보인 김해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간 예선전이 치열하다.

4·27 김해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 당간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손 대표는 28일 김해를 찾아 선거지원에 나선 가운데 참여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온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순탄치 않다"며 "연대와 협력을 위한 최상의 조건인 상호존중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결여된다면 민주주의 정신은 패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 헌신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존중되기 바란다"며 참여당이 시민사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 대표인 이인영 최고위원도 "김해 선거는 친노 세력 가리기가 아닌 현 정권 심판인 만큼 노 전 대통령 적자 논쟁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현장투표 방식을 마녀사냥식으로 돈·동원선거로 폄하하지 말라"고 가세했다.

손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 주 4일간 김해에 머물며 단일화 승기 잡기에 나선다. 김해에 상주하고 있는 유 대표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에는 자당 곽진업 후보가 '친노'를 내세운 참여당의 이봉수 후보에게 인지도는 밀리지만 본선 경쟁력은 앞선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8%포인트)에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선 곽진업 민주당 후보가 38.0%의 지지를 보여 참여당 이봉수 후보(37.4%)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로 유력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상대로 한 가상대결에서는 곽 후보가 47.7%의 지지로 37.1%에 그친 김태호 후보를 10.6%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다. 이 후보 역시 45.7%의 지지로 김태호 후보(40.5%)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차 상으로는 곽 후보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문제는 야권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현재 양당은 시민단체 중재로 '국민참여 경선 50%+여론조사 50%'로 단일화한다는 데까지 합의를 했으나 구체적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참여당이 "제1야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운 조직선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장투표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협상단 접촉에서 '현장투표로 하되, 선거인단 모집 주체를 야 4당으로 확대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을 택하자'는 제3의 중재안이 나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유력한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중앙당 지원을 거부하고 혼자 밑바닥을 훑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이재오식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정국 후폭풍

정부, 김해공항 확장 검토

지역 의원 "대국민 사기극"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28일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가깝게는 4·27 재보선, 길게는 내년 총선·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토해양부 입지평가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자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홍사덕·박종근·이해봉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만약 채점도 하기 전 불합격을 정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을 증명한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공항 가덕도 유치에 나섰던 부산지역 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간다지만 부산 여론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새롭지도 않은 김해공항 확장론을 갖고 분란만 일으켰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에서 반발이 예상되자 여권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재균 "31사단 시외곽 이전" 서명 운동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은 28일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에 주둔하는 육군 제31사단의 시 외곽 추진 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 국방부에 발송했다"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군부대의 시 외곽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 삼각동 일대 약 44만평에 걸쳐 주둔하는 육군 제31사단은 지난 1955년 광주 도심 외곽에 주둔한 이후 향토사단으로서 나름 역할을 해왔으나, 신흥 주거지역의 확대로 인해 이제는 북부지역 도심 한복판에 있게 됨으로써 도심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국방부의 승인으로 오는 2013년까지 시 외곽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된 전주 35사단의 사례를 볼 때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가칭 '31사단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野의원 14명 신규 원전 백지화 결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등 야 4당 소속 의원 14명은 28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수명 연장을 거쳐 가동 중인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PC방 컵라면 판매 허용"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 등에 물을 부어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상 휴게음식점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달라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 판매하면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과 1회용 다류 등에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